

동일 Focus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와 북한체제



동일 Focus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도발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UN 안보리에서는 지난 3월 3일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의 한반도 통

북한체제 전망

외통일자문회의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일환경과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대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북한동향을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와 북한체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좌담회에서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태우 건양대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언록 형태로 정리했다.

대북 제재, 일관성 갖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성과 기대할 수 있어

북한에 핵으로 생존 불가능하다는 것 알게 해야 해

동일Focus

● **남성욱 고려대 교수(진행)** :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통일환경과 동북아 정세를 진단해 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이행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대북 제재 이후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 핵실험 이후의 남북관계 변화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에 관한 대북정책 추진과제를 짚어보고, 4차 핵실험 이후 변화된 통일환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방안에 관한 제언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의 상황에 관해 홍양호 전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성 옥
고려대 교수

● **홍양호 前 통일부차관** : 금년 초 1

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한 달 뒤인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려 있습니다. UN에서도 안보리의 논의를 거쳐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이슈가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에 대해서 무시하는 정책을 주로 써왔습니다마는 이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고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매우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상·하원에서 강

▶좌담

- 남성옥 고려대 교수(사회)
-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김태우 건양대 교수
-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대북제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관심사가 되었고 또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핵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안보 위기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동북아 평화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것이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환영한다’,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이견을 제기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의 독자 제재와 유럽국가 등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북제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관심사가 되었고 또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어 앞으로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과거처럼 상당히 강한 반발성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미군사연합훈련과 맞물려 있고, 5월에 있을 제

7차 노동당대회 때문에 북한은 최소한 그때까지는 강한 반응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여러 가지 행동조치에 대해서 강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김정은은 앞으로도 핵폭탄 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적어도 제7차 노동당대회 이전에 한 번 더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홍 양 호
전 통일부차관

이러한 상황을 보면 상반기까지는 한반도 정세가 위기와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공조체제를 갖추어 갈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핵문제가 한반도 안보 이슈의 중심 대

● **남성욱** :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핵 전문가이신 김태우 박사님께서서는 이번 핵실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실체와 기술적 수준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우 건양대 교수** : 지금 남북 안보관계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남북간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외부환경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매우 큰 고민거리입니다. 한국이 정치적·경제적·외교적으로 엄청 성장해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에 신냉전이 진행되고 중국이 한반도 핵계임을 미국과의 게임으로 간주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외부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가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더 큰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 북핵에 대해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북한을 도와주는 이중성을 보여온 것입니다. 이런 외부 변수, 구조적인 변수를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는 자꾸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경제성장이 사실상 멈춘 상태이고 중국은 아직도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북핵 위협에 대



겉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북한을 도와주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구조적인 변수를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치하면서 미사일 능력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관해 살펴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개발과 동시에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핵폭탄을 투발수단에 탑재해야 핵무기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

북한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80년대 이후에 스커드미사일, 90년대에 노동미사일과 대포동미사일,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KN-08과 같은 ICBM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인 지금 현재에는 대륙간탄도탄의 실전 배치가 가시화 될 만큼 성장한 상태입니다.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따지면 대략 20년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액체연료 미사일 분야에 있어 그렇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이 그동안 액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고체연료 미사일 부문에 있어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들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고체연료 쪽에도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KN-02와 같은 고체연료 미사일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핵무기에 있어서는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미사일에 있어서는 세계 6위권의 강대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위까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면 북한과 이스라엘, 인도 등이 6위권의 미사일 강대국입니다.

● **남성욱** : 고체연료가 완성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 **김태우** : 통상적으로 우주개발을 위한 로켓발사라든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발사체에는 액체연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액체연료는 화력이 좋지만 주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래서 기습적 발사가 가능해야 하는 군사용 미사일에는 고체연료가 더욱 편리합니다.

● **남성욱**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체연료는 주입하고 72시간 안에 발사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되는 기술적 문제가 생기는데 반해 고체연료는 주입해 놓고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남북간 핵·미사일 능력 차이는 20년

● **김태우** : 예, 고체연료가 안정적이지요. 안보와 연관지어 보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위협적이지요. 북한이 이미 이동발사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고체연료 미사일까지 가지게 되면 매우 위험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kill chain이나 미사일방어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교훈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년의 스푸트니크 충격을 아실 것입니다. 소련이 1957년에 처음으로 지구궤도에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미국 전역이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shock)이라고 부릅니다. 소련은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가졌는데 미국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missile gap이라는 화두를 놓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으며, 미국 정부와 군은 소련의 미사일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20년 이상 뒤쳐져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한미 미사일각서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미사일가이드라인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차원에서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중량을 제약하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찍부터 ‘미사일 주권론’을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에 상당부분 해제되었습니다. 한미간 합의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가 800km로 늘어났고,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약이 없어질 정도로 상당부분이 해제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따라잡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미사일 격차를 메우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너무 더디고 느긋해보여서 안타깝습니다. Sputnik shock 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제재 동참...북 움직임 지렛대 확보

● **남성욱**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비롯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러의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국제공조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고, 중·러도 동북아 국제질서의 핵심 담지자로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형식적·제도적인 면에서 대북 제재를 둘러싼 현재의 동북아 상황은

‘5대 1 포위망 구조’의 배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중·러·일 5개 주요 제재국(Sender)이 대상국(Target) 북한을 촘촘한 제재의 그물망으로 포위하는 국제 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이 태동된 것입니다. 보다 강력하게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더불어 미국은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경제제재 실현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쌍방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UN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국제여론을 형성하는데도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러의 협조를 확보하여 이전 제재안들보다 훨씬 강화된 다자제재(Multilateral Sanction) 조치들을 포괄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왔지

만 동북아 안정과 비확산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중·러도 이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국제 제재 연대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제재국, 그리고 제재국 내 개인이나 법인의 감독(Monitoring)·억제 장치로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대북 제재 집행법안(H.R. 757,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을 신속히 발효시켰습니다. 이론상 ‘이탈 제재국도 제재’ 할 수 있는 물샐 틈 없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더욱이 미국은 한국 방위 및 확장억제 의지와 능력을 거듭 확인하며 비핵화 및 대북 제재에 대한 공약 신뢰도(Commitment Credibility)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제적 대북 압박공조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월 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 장면.



북한 비핵화가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인데 반해 미·일·중·러는 이를 강대국 정치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가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인데 반해 미·일·중·러는 이를 강대국 정치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미·일 중심 동아시아 민주국가 연대 및 삼각 군사동맹의 확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정학적 파워게임의 논리와 전략적 계산 하에 제재 이행 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완충국(Buffer State) 역할을 하는 북한을 거둬들인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곤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대북 제재를 미·중 경쟁과 협력의 구도 하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못지않게 사드(THADD) 배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은 강화된 UN 제재 조치들을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축소되어 왔던 대북 통제력 회복의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국제사회의 강대국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국가는 러시

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베리아 개발과 동방정책 추진에 있어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 제재 강화로 삼각 경협 프로젝트도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가 반대편 동아시아에서도 공고히 구축된다면 일종의 양면 봉쇄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일본 아베정부는 북핵문제 악화를 보통국가화 전략 추진 동력 확보 계기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 법안의 신속한 의회 통과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핵무기 개발, 인권상황 악화 등 북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조야에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미국이지만 북한 핵문제를 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

리처럼 절박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북핵문제 악화를 동아시아에서의 재균형(Rebalancing)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 제재 역시 중국 압박을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요.

한국으로서는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상충되는 국익을 가진 제재국 간 정책조율(Policy Coordination)을 통해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 **남성욱** : 박인휘 교수께서는 5자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독제재와 양자제재 · 다자제재로 진행, 성과 기대돼

●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 김 박사님께서 5대 1구도를 말씀하셨는데, 5자회담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5대 1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내용적 의미의 5대 1 구도이고, 그것이 외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종의 국제분업구조가 필요하

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 핵심 당사자국이거나 관여국들이 미국과 중국 등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보니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차별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미국과 똑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자회담이라는 제도적인 형식으로 다 모이는 것은 쉽지 않고, 다만 내용적인 의미에서는 북한의 변화, 북한 제재에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행동이 전형적으로 그런 것이죠. UN결의안이라는 다자적 제재의 큰 틀에는 동의를 하면서 개별적 차원에서의 제재는 그들만의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대회를 갖고 있는 미주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방식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추가 핵실험은 현상악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계산방식에는 일정 부분 현상유지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는 현상악화라는 공감대가 확실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우리 중심의 단독제재, 그리고 한·미, 한·중, 한·일로 엮이는 양자제재, UN으로 표현된 다자제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에 동북아에 자리 잡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개별적인 외교와 안보 악화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봉 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北 핵 도발은 세계 경제 악화시킬 경제 도발

● **남성욱** : 이번 유엔의 대북 결의안 2270은 비군사적 제재 차원에서 사상 최고의 고강도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제재안으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

해 간략하게 언급한 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를 압박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에 도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또한, 공포정치를 통해서 핵심 군 간부들의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부추김으로써 군사적으로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 북한의 도발과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세계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제도발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구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북한이 도발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세계를 향한 도발로 인해 세계 경제의 역량결집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돈줄 차단과 경제 압박



북한이 해외에서 관리하는 외화가 약 1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이 묶이게 되면 북한의 대외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통치자금 조달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는 미국과 일본, 우리가 추진하는 양자 간의 제재도 있지만, UN 안보리에서 채택했던 대북 제재안은 과거와 달리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강력하고 포괄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돈줄 죄기입니다. 북한이 1년에 벌어들이는 외화가 정상적인 수출까지 포함해서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중 수출의 경우 상당수가 지하자원 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 수출을 통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돈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금융거래 제한, 그러니까 북한의 외화 유통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은 벌어들인 외화를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북한 은행의 지점이 개입하



중국 라오닝성 단둥시 외곽에서 바라본 북한의 작은 포구에 무연탄이 쌓여있다.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의 광물 수출이 통제되고 있다.

여 관리하고 유통시키는데, 이번 대북 제재로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과 사무소가 폐쇄되면 북한은 제3국에서의 송금이 막히고, 외화 유통을 할 수 없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 해외에서 관리하는 외화가 약 1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이 묶이게 되면 북한의 대외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통치자금 조달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2005년에 2500만 달러 규모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북한의 타격이 컸는데, 이번 유엔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는 BDA 건보다 100배 이상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원유입니다. 물론 항공유에 한정되어 있지만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연간 50만톤 정도 원유를 공급 받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시행되면 연간 20% 정도의 원유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게 되면 북한의 정상적인 수출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화벌이 차질 예상돼, 15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

● **남성욱** : 북한의 돈줄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또한,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봉현** : UN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경제는 2011



제재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 국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년부터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도 공식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 대 이상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 북한 경제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2016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 내지는 마이너스 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고 지속된다면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가장 어렵다는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마이너스 4% 정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로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가 예상키로는 연간 15억 달러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수출을 포함해서 인력 송출과 관광 수입 등 북한이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가 4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연간 15억 달러 정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광물 수출 금지로 대략 10억 달러의 차질이 생길 것이고, 화물검색과 선박의 입항 제한으로 인한 수출에서 4억 정도 차질이 생길 것입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에 관한 국회연설을 했다.

니다. 항공유에 한정되지만 원유 공급에서도 1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얼마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북한 광물 수출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 국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는 제재국면에 이르면 북한이 항상 편법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개인 통장이나 기업 통장의 경우에 다른 사람과 다른 기업 명의로 만들어서 위장 형태로 계속해서 금융거래를 했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밖에 없습니다. 거래 통장이 불법계



중국이나 라오스, 베트남 등 곳곳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주로 당 39호실로 가게 되는데, 이런 외화벌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중국 당국 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 제재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아마도 3~4개월 정도가 지나면 구체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홍양호** : 이번 UN의 대북 제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범위라든지 강도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로 여섯 차례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북 제재 결의를 하고 난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북한 경제의 생명줄을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UN 대북 제재에서는 중국이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미국이 UN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secondary boycott이 포함된 대북 제재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융 제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권문제와 사이버 테러문제 등 포괄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찍이 독자적인 제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1인

당100만엔까지 대북 송금은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1인당 10만엔으로 줄였습니다. 10만엔이면 우리 100만원 정도이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선박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조총련의 핵심 멤버들이 북한에 가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도 강력한 제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그리고 수출입 통제는 과거에 5.24조치때 했던 것을 좀 더 강화시킨 것으로 실제 성과는 불투명하지만,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이용 자제와 같은 것은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중국이나 라오스, 베트남 등 곳곳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주로 당 39호실로 가게 되는데, 이런 외화벌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UN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 다만, UN 제재와 그리고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모두 이행된다면 북한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조봉현 박사께서 3~4개월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 변화로 유야무야 된다는지, 특히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효과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력해 간다면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 그렇다면, 이번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드문제, UN결의안과 연계 유연하게 대처해야

● **김태우** :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어 충분한 효과가 발휘한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핵을 통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핵 때문에 죽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월 25일 김정은이 북한군 포병훈련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최대 관건은 대북 제재가 일관성을 가지고 단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대북 제재망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핵 때문에 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대북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면, 최대 변수는 중국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셨는데, 사드배치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이익에 따라 우리가 결정한다는 기조는 지켜나가야 하지만, 유엔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상황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이 사드 배치를 시비하여 대북 제재를 사보타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속한 배치를 밀고 가기 보다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확인하는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역은 1억 달러가 되지 않고 경제적 협력도 미미합니다. 또 김진하 박사의 얘기처럼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중국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이행에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도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최대 핵강대국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며, 북한의 인력송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위해 앞으로는 러시아에 더 큰 외교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독자 제재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8일 꽤나 강력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독자 제재가 미국이나 중국의 대북 제재만큼 강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한을 들린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 것 등은 북한경제에 꽤나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을 들렀다 한국에 온 선박이 60여척이고 회수로 100회가 넘습니다.

여기서 최대 관건은 대북 제재가 일관성을 가지고 단호하게 추진



북한의 300mm신형 방사포 시험사격 장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이중성을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제재를 이행하고 러시아도 협력하는 가운데 미국도 금년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도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대북 제재망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대화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게 되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일관되게 대북 제재에 집중하는 위기

● **홍양호** : 이번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중국은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방정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회적으로 회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우도 중앙정부에서는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정부에서는 지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 지침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남성욱** :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한반도에 사드



**비핵화나 체제변화와 같은 정치적 영역으로 전환될 것인
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국변
수를 얘기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를 배치하면 과연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성공 여부가 중국의 적극
적인 참여 여부에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진하** :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제 제재의 구조와 효과
가 제재국과 대상국은 물론 제재국들 간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
(Strategic Interaction)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재국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슈 간 연계정치(Linkage Politics)
와 교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번 UN 결의안 합의 도달과정에서
미·중 간에 모종의 협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중 간 직접적 빅딜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
만,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의 적극적 제재 동참을 은근히 압박하는 압
시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정부가 그간 유예해 오던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
정하면서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협조를 견인해 내는 전략적 기민성
을 발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북핵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

여 직접적인 대중 관여 못지않게 한미동맹을 경유한 압박전략 구사도 매우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실례입니다. 북한 리스크(Risk)를 우회적으로 중국에 투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인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배치가 중국의 이탈을 불러올 가능성도 유동적입니다. 미중 간에는 북핵 뿐만 아니라 남지나해와 대만 문제, 이란 및 미얀마에서의 영향력 충돌, 군사안보 및 경제부문에서의 갈등과 협력, 인권 등 실로 다양한 지역 및 이슈 영역(Issue Area)에 걸쳐진 복합적인 갈등과 경쟁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사드배치와 대북 제재 동참 문제가 배타적인 1대 1 교환관계로서만 다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는 안보상의 중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중 간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국가 간 권력 게임이 아니라 기술적·행정적 문제로도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UN 제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의 유통이나 공유, 국가 행정력의 미비, 그리고 국제사회의 영향력 투사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제3세계 오지 국가에서 그런 사례가 종종 나타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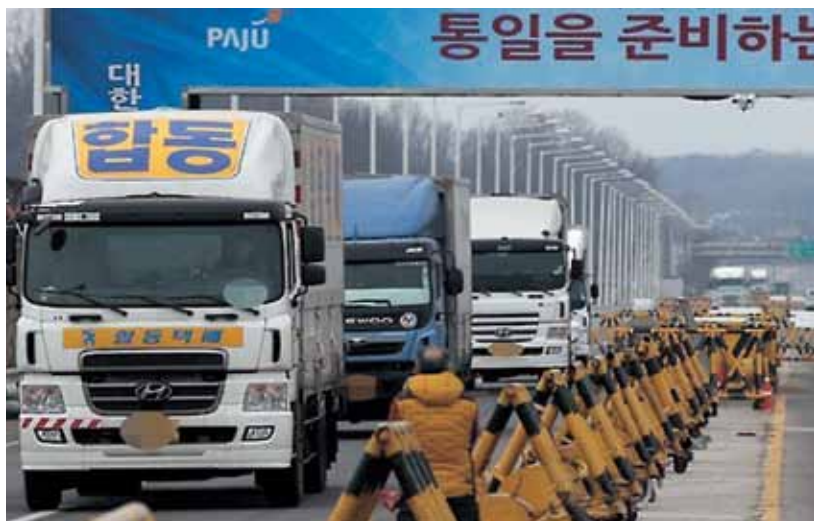
UN도 이런 문제점 극복을 위해 취약지역에서도 UN 결의가 정확하게 인지되고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이나 현장 집행 매뉴얼 작성 등 다양한 행정·기술 지원 제공을 통한 원거리도달(Outreach)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로 중국, 러시아를 통한 불법 무역과 자금 거래가 어렵게 된 북한이 아프리카 등지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 있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도 정부차원에서 이들 지역의 잠재적 제재 이탈국가들을 대상으로 제재 관련 정보를 유포하고 이행을 강력히 권고하는 외교적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북한 비핵화 · 체제 변화 기대하기 어려워

● **박인휘** : 이번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북핵문제에 대해 관여정책을 해왔는데 왜 북한이 정치 군사적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북한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대북 제재를 확실하게, 끝까지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2월 11일 오후 파주시 통일대교를 통해 돌아오는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핵화나 체제변화와 같은 정치적 영역으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국변수를 얘기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북 제재에 중국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국제사회적 분위기와 보조를 맞추어 갈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차원에서 어떤 action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사드문제와 중국의 제재 동참의 빅딜에 관한 의견이 있었는데 빅딜이라기보다는 사드문제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지만, 미국 의회의 대북 제재법안 통과와 행정부의 결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단독 제재로 북한문제에 접근했을 때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가 복잡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UN 중심의 다자국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지속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정치적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실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독석리 일대 해변에서 한미연합상륙훈련이 진행됐다.

● **남성욱** :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대남 비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표현도 개인적인 비난 뿐만 아니라 거의 폭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이기는 하지만 비난 비방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동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조봉현** : 북한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우선 한미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 나름의 대응 매뉴얼을 설정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 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위협과 협박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험

악한 표현을 쓰면서 협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김정은에게 가식적인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 더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단순한 협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서 통치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정책결정 과정들을 보면 무모하게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체제에서는 나름대로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 이해득실과 같은 것을 따지면서 도발을 한다든지 한반도의 긴장수위를 높였다고 하면, 김정은은 다소 즉흥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으로 무모하게 나서거나, 오만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3일 실시한 우리 육군의 다연장로켓 '천무'의 실사격 장면

북한 정권 내에 그런 불안한 징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공고하다면 연이은 도발에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집권 4년이 지나고 5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신의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회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감을 불러 넣기 위해 계속해서 도발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北 위협과 협박, 무모한 행동으로 실행할 가능성 있어

● **홍양호** : 북한은 대외적인 행동을 해나갈 때, 전략적인 측면이 강한 때도 있었고, 계산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때도 있고, 브링크맨십(brinkmanship)처럼 무모하게 위기를 조성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혼합적으로 운용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봉현 박사님 말씀처럼 무모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외부의 위협이 아주 강할 때는 순발력 있게 타협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김정일 시대에는 전략과 계산이 아주 철저한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 김정은 시대는 전략적인 면도 밑바닥에 깔려 있겠지만 무모함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리더십과 성격에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 북한의 경제일꾼들이 자기들은 바깥에 나가서 고생고생하면서 어렵게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데, 대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힘 안들이고 말로, 그리고 글을 써서 충성을 인

정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평통 등 북한의 대남사업 부서에서는 신명이 날겁니다. 그들은 상부로부터 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험한 말을 하고, 더욱 더 위협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협과 협박으로 점철된 ‘말폭탄’을 하게됩니다.

● **남성욱** : 북한의 제7차 당 대회가 5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5차 핵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과연 북한이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태우** :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는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앞으로 북한이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생물무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화되고 있듯이 사이버테러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체제를 보면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많은 군 장성들을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C.스테니스호가 3월 13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북한은 남북 간에 포를 쏘는 등 직접 물리적으로 부딪치는 도발을 하게 되면 한국군이 바로 응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발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직접 대한민국 군대와 부딪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런 차원에서 사이버테러도 실행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북한의 언어 협박에 대비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의 언어 협박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점잖게 대응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대비해야겠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 Black Swan과 Broken Arrow도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lack Swan’ - 정말 예상치 않은 일이 북한

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북한체제를 보면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많은 군 장성들을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진 원로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부 쿠데타가 될지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Broken Arrow- 부러진 화살’입니다. 핵무기 분실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체제는 붕괴되고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남성욱** :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핵실험을 하고 지난 1월에 핵실험을 했는데 핵실험에도 주기가 있나요? 과거에는 3년 또는 4년 간격으로 핵실험을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할 수도 있는지요.

北, 수소탄 개발 위해 계속해서 핵실험 할 것

● **김태우** : 기본적으로 핵실험은 기술적 수요(technological demand)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정치적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핵실험 시기나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성능을 점검하거나 안전하게 운용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핵실험입니다. 일각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

을 충분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1,000번 이상 핵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월 6일의 제4차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수소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시켜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한 제2세대 핵무기이며, 증폭분열탄은 융합기술을 일부 활용하여 분열의 효과를 높인 분열탄으로서 수소폭탄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융합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압력과 고열이 필요한데, 때문에 수소탄 안에는 원자탄이 들어갑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은 앞으로도 많은 핵실험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핵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몰수한 북한 선박 '진텅호'



지금 국면에서는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정 시점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험 주기는 북한의 기술이 얼마만큼 진화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짧아질 수도 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핵 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핵실험을 멈출 것입니다.

요컨대,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서 ‘원자폭탄’ 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며, 북한이 조만간 원폭보다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원자폭탄 실험을 한 후 2년 7개월 만에 수소탄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중국이 약간의 시차 만을 두고 원자탄과 수소탄 개발을 함께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벤치마킹 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물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타이밍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4월에는 태양절(4.15)과 인민군창건일(4.25)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홍양호 :** 지난해 11월에 김정은이 핵실험을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한 달 뒤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 언론에서 김정은이 핵탄두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엄포용일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실행할 것이

라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안이하게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남성욱** : 최근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북미간에 평화협정 논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은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은 없다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북미간에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진하** : 북한이 핵실험 이전에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뜻 수용하기 힘든 평화협정이라는 안건을 내밀고 미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구실을 마련코자 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



2월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정부 대책반 회의가 열렸다.

다. 북핵문제의 극적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 안정유지를 바라는 임기 말 오바마 정부를 압박 또는 회유하려는 전술적 의도도 읽혀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 주장대로 비핵화 이슈를 배제한 채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인 것이지요. 한미동맹의 신뢰 유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결렬이죠. 오히려 뒤늦게 언론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사실이 알려진 배경이 중요한데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 등이 비핵화 및 평화협정 동시 협상 추진이라는 자칫 제재 국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제안을 들고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해봤었지만 실익이 없었다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거지요.

향후에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미 압박 카드로 평화협정 이슈를 활용하려 들 수 있습니다. 북한도 중단기적으로는 제재국면 이완이나 국제공조의 균열을 노리면서 시간을 벌고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차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핵위협 확산,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등을 연쇄 고리로 하는 핵무장 기정사실화 및 한국역포위전략 차원에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문제 피로도가 축적될 경우, 이러한 제안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 **남성욱** :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선에서 힐러리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평화협정 문제를 비롯해서 북미관계와 향후 대북정책에 관해



지난 2015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300mm 신형 방사포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평화협정은 비핵화에 필요한 사전조치가 전제돼야 해

● **박인휘** :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 들어서 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 국면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미 행정부의 집행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차질이 빚어 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하고 원칙적인 힐러리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와 동아시아 문제에 매우 관심

이 많고 해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북·중 관계에 있어서의 게임이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의도하지 않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정책의 단절성이 야기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강력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평화협정 문제는 언어적으로만 보면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의 로드맵에서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고 우리가 떠안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의미 있는 평화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전조치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조치에 대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화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북한 버전으로 계속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버전으로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조용히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UN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의 동참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또한 북한을 상대로 한 대화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논리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외화가 1년에 1억 달러 정도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북한경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돈줄이었습니다.



● **남성욱** :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제에 관한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불리 출구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동력을 잃지 않고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아픔 있어

● **조봉현**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당연히 압박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도 만들었고 가슴 아프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개성공단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었고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외화가 1년에 1억 달러 정도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북한경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돈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생 목적으로 이용이 됐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상당수가 39호 실이라든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비생산적인 부분에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적이라든지金正은의 통치자금으로 많이 이용됐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또한 UN 차원에서의 제재와 더불어 여러 국가에서 제재에 나서고 있는 국면에서 좀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 내고 북한을 압박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에 반발해 금강산 관광까지를 포함한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후인 3월 6일 중국 지린성 훈춘 통상구 앞에서 북한 나선시로 들어가려는 차량들.

경제협력과 교류사업에 관한 모든 합의에 대해 무효 선언을 했는데, 저는 북한의 합의 무효선언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교류협력사업 모두가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효선언을 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 관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효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것을 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자산동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시설과 설비 등을 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큰 틀에서 출구전략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는 교류협력을 재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형태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경제로 갈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면에서는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정 시점 이후에 효과적인 새로운 형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미국과 중국에 우리의 결기를 보여 주었지만 또한 그로 인해 123개 개성공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돼야

● **홍양호** :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을 때 일각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먼저 써버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의 입장이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UN의 대북 제재와 중국의 동참, 주변국들의 독자적인 제재를 보고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의 연속 개발이라는 안보상의 위기 속에서 개성공단을 중단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국민의 신변안전 때문에 급박하게 이루어진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내려진 결정이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인과 주재원 또한 우리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지원과 향후 경영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개성공단 자산을 몰수 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남북간에는 '투자보장합의서'가 있습니다. 투자보장합의서는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받았고 우리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서 사실상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투자보장합의서에 의하면 효력이 정지된 후에도 10년간 북한이

국유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알리고 홍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몰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투자를 유치하려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교훈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우** : 지금까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나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며 해결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는 중에도 국가와 국민은 안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 국면이든 긴장 국면이든 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지난 1월과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국내와 해외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문경시협의회에서 개최한 규탄대회.

적 억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선제적 명시정책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도발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임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사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정부의 선택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을 구분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란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항구적으로 무력충돌을 피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항구적 구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는 남과 북의 체제가 상호 적대적이지 않고 공존적·협력적일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인데,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 체제를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북한은 북핵 문제를 흥정하자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제로섬게임,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둔 채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에 관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의 선전, 선동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민주평통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금 중국도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

며 북한 편을 들고 있는데, 우리 외교 당국에서는 이를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차이점 이해시키는 노력 필요

● **김진하** : 북한의 핵무장 및 투발수단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에 대응하는 억지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즉각적인 실존적 위협입니다.

향상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한국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핵 공갈을 가하거나 무력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는 위험스런 강압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치명적인 핵 협박(Nuclear Blackmail) 시대의 도래를 목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안정을 인질 삼아 노골적인 생존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향해 결기를 가지고 대응에 나선만큼 도발과 위기 악순환 심화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야겠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악화시키는 에스컬레이션(Crisis Escalation)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이를 결연한 의지로 대처해야 합



한국은 치명적인 핵 협박(Nuclear Blackmail) 시대의 도래를 목격하게 될 것이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안정을 인질 삼아 노골적인 생존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경과 의지의 대결’ (War of Nerve and Resolution) 상황에도 의연히 맞서 나가야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주춤할 경우, 위기는 보다 악화된 형태로 재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출구전략의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확고한 안보의지 결집과 제재 실효성 확보에 보다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병영국가 특성과 숙청·공포정치를 통해金正은의 절대권력 확립에 집중하고 있는 체제 내부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이 국제포위구도 돌파책으로 위기 고조전략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가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오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전달 (Signalling)할 때, 오히려 위기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2일 북한은행과 달러·위안화 등 모든 화폐 거래를 중단했다. 사진은 단둥농상은행



**대북 제재는 북한의 리더십과 지도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지 북한의 보편적인 주민들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 할 국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 **남성욱**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
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요?

● **박인휘** : 우리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7.7선언 이후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
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북한핵 도발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
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
한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북한 핵문제는 그동안 한반도 수준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차원의 문
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우리의 문제라는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도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박근혜정부에서는 한미관계와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적 성과가 이번 북한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훼손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를 우리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스마트한 제재, ‘영민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리더십과 지도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지 북한의 보편적인 주민들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나름대로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강화된 우리의 대북 제재가 과거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자는 것이지 우리의 국가 정체성인 평화 지향적인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제재 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력도 있고 지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스마트한 제재, 영민한 제재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 최근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중단이 불가피했다’는데 공감을 표시한 의견이 60%이고,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는 응답이 35%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시 재개해야 한

다’ 는 의견이 57%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중단의 불가피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문제가 ‘우리의 문제’ 라는 주도권 확보, 매우 큰 의미있어

● **홍양호** :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 안보상의 위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국민과 개성공단 기업들이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에서의 개성공단이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전략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인 지난 2월 2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북한식당 평양랭면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개성공단은 통일정책적 측면과 산업정책적 측면, 또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는 측면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핵심가치는 안보이기 때문에 나라의 존폐와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는 안보 위기 앞에서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개성공단이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국가 안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85%가 주문자생산업체입니다. 원청업체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제품의 생산 주문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이 생산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청업체들이 이제 개성공단은 안정성이 없는 곳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5개월 동안 중단이 되었었고, 이번에는 전면 중단이라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후 UN의 대북 제재 결의 이전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일부 원청업체들은 개성공단 기업에 오더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은 안보상황에 관해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들의 희망과는 달리 이미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재가동되려면 몇가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북한핵 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13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나서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관계 상황이 한반도 평화에 공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수준에 이를 정도까지 되어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서 정경분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작금의 남북관계 수준을 볼 때 그렇게 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가동하고 싶다는 희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정경분리원칙 확실해야

● **조봉현** :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나서서 북한지도부를 변화시키게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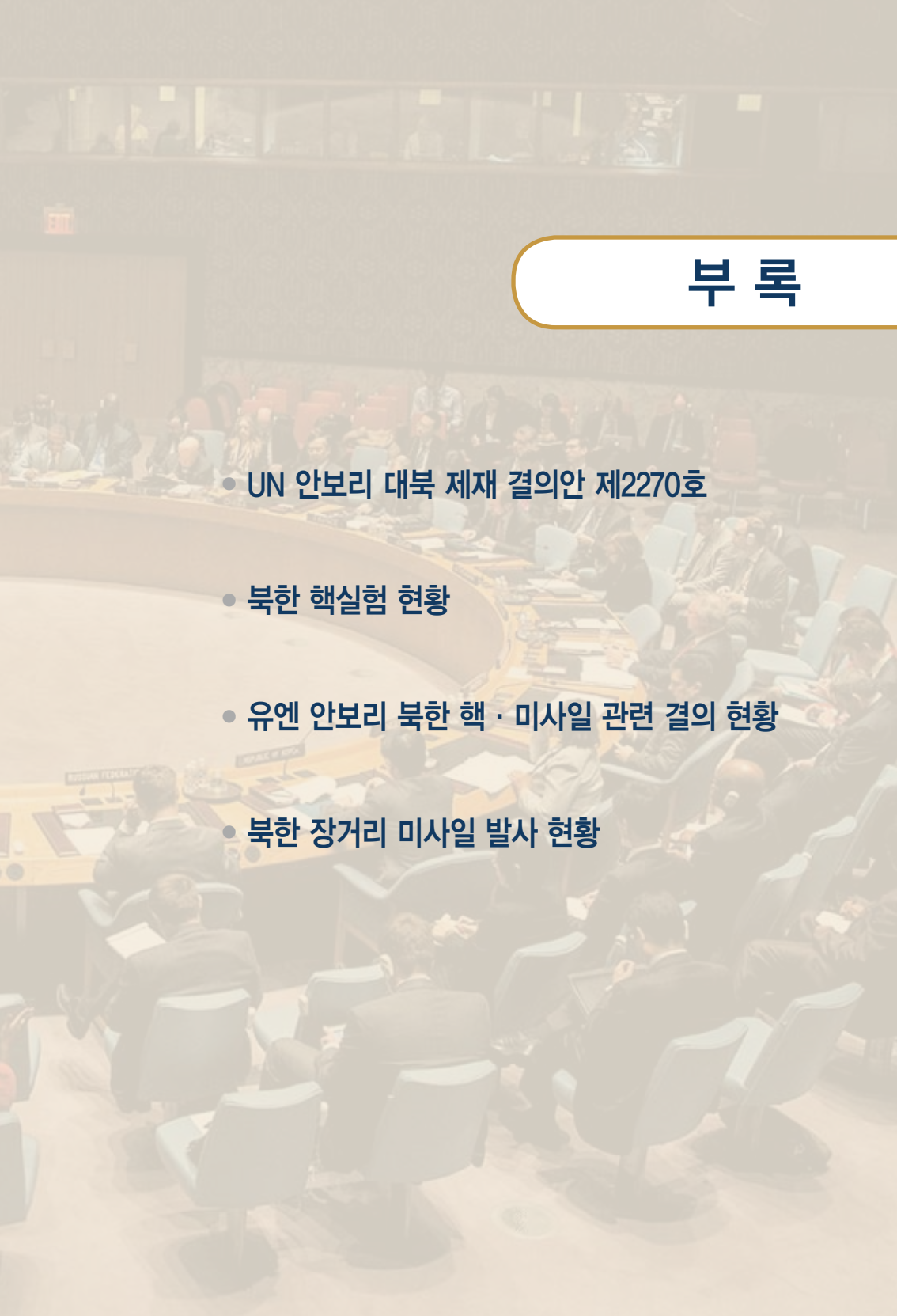
북한 경제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서는 북한 외화수입의 또 다른 채널인 해외 식당 운영을 비롯한 인력송출 사업을 차단해야 합니다. 비공식 인력송출까지 포함할 경우 2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연간 4~5억 달러 정도의 외화수입을 얻고 있고, 북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문제도 심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도 통제해야 합니다.

핵 국면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북한의 장마당에서부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 결국 북한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김정은 정권이 읽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강력한 압박과 병행하여 아래로 부터의 내부적인 변화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무서워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이 아닌 개혁·개방의 길에 나서도록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 **남성욱** :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동안 고견을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통일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포커스





부 록

-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제2270호
- 북한 핵실험 현황
- 유엔 안보리 북한 핵 · 미사일 관련 결의 현황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현황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제2270호 (2016. 3. 3)

구 분	분야별 주요 내용
전 문	-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 표명 -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거래로 얻는 소득이 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
우주 협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
무기 거래	- 북한의 소형 무기(small arms) 수입 금지 -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임을 명확화 - 북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 적용(예외: 인도주의·민생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 재래식무기 catch-all -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자문관 초청 등 금지
확 산 네트워크	-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 (예외: UN 관련 목적, 사법절차상 필요성·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 북한의 불법 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 (예외: 사법절차상 필요성·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 제재 개인·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파견 대표 추방 - 북한의 위장회사 활용에 주목, 제재위가 관련 개인·단체를 규명하여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 -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방지
해 항공 운송	- 자국영토내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예외: 민생목적·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을 제재위 사전 통보시) -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보험제공 금지 (예외: 민생목적·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을 제재위 사전 통보시) -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예외: 비상착륙)

구 분	분야별 주요 내용
제재 대상 지 정	•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 •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화
생화학	• 북한의 모든 화학·생물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 포기 결정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이행 및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가입·이행 촉구
수출 통제	•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가능한 물품 목록을 제재위에서 작성 • 생물·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의무화
대외 교역	• WMD 개발 연관시 석탄, 철, 철광 수출금지 (예외: ①민생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②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 통보시) •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는 전면 수출금지 • 대북 항공유(로켓연료 포함) 판매·공급 금지 (예외: 인도주의적 목적, 제재위 사전 허가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금 융	• WMD 관련 북한정부·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자원 이전 금지 (예외: 외교공관, 인도적 활동) •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예외: 인도지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유엔활동 등) •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 금(gold)의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 FATF 권고 7 이행 촉구
사치품	• 예시목록에 7개 품목 추가 (총 12개 품목으로 확대)

**출처 : 외교부

북한 핵실험 현황

구 분	1 차	2 차	3 차	4 차
시 기	2006. 10. 9	2009. 5. 25	2012. 2. 12	2016. 1. 6
장 소	길주군 풍계리	김책시 화대군	길주군 풍계리	길주군 풍계리
핵폭탄 종류	재래식 고폭탄	플루토늄 핵폭탄	고농축 우라늄탄 (추정)	첫 수소탄 (北 주장)
지진파 규모	3.6	4.5	4.9~5.1	4.8~6
위 력	1kt	2~6kt	6~7kt	6kt
미사일	대포동2호	광명성 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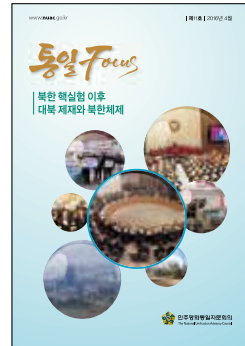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탄두가 개량된 KN-08을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 핵 · 미사일 관련 결의 현황

- 1993. 3. 12 ● 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 5. 11 ● 유엔 안보리, 북한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핵 · 미사일 관련 첫 결의
- 2006. 7. 5 ● 북한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발사
- 7. 15 ● 유엔 안보리,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자 · 상품 · 기술 · 자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결의 1695호 만장일치 채택
- 10. 9 ● 북한, 1차 핵실험 감행
- 10. 14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 만장일치로 채택
- 2009. 5. 25 ● 북한, 제2차 핵실험 강행
- 6. 12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전문가 패널 구성 등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 만장일치로 채택
- 2012. 4. 13 ●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 12. 12 ●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2호기 발사
- 2013. 1. 22 ● 유엔 안보리,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해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 · 강화한 결의 2087호 만장일치로 채택
- 2. 12 ● 북한, 3차 핵실험 감행
- 3. 7 ● 핵 ·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 2094호 채택
- 2016. 1. 6 ● 북한, 4차 핵실험 강행. 첫 수소탄 시험 성공 주장
- 2. 7 ●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 3. 3 ● 유엔 안보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만장일치로 채택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현황

- 1998. 8. 31 ●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 1호(백두산 1호) 발사
- 9. 4 ● 다단계 운반 로켓(백두산 1호)으로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 궤도 진입 성공 발표
- 2006. 7. 5 ●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 2호 발사
- 2009. 4. 5 ●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은하 2호 로켓 발사.
-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2호 궤도 진입 발표
- 2012. 4. 8 ●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외신기자에게 은하 3호 로켓 공개
- 4. 13 ● 은하 3호 발사. 발사 135초 만에 백령도 상공서 폭발.
-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3호 궤도 진입 못했다'발표
- 12. 4 ● IMO, 북한 1단계 추진체 및 덮개(페어링) 등 낙하지점 좌표 통보 발표
- 12. 12 ●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발사 9분 27초 만에 위성궤도 진입 성공
- 2015. 9. 23 ● 북한 우주개발국(NADA), CNN 통해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공개
- 2016. 2. 6 ● IMO에 광명성 발사 예정 기간 2월 7~15일로 통보
- 2016. 2. 7 ●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 자료집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통일환경과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와 북한체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문가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일포커스 제11호

발행일 2016년 4월
발행인 배정호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변인실 02)2250-2265

※ 이 자료집에 정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Focus

